

- (개선)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평가(investor pay)를 할 수 있도록 허용
- 다만, 발행기업으로부터의 자료제공 없이 공시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*를 마련
- * i) 법령에 따라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신용등급으로 사용불가
ii)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하여 등급 표기 등

② 신평사 선정신청제 실시

- (현행)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 하에서 '등급 쇼핑'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장의 의혹 존재
- (개선)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하여 통보하고, 이 경우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
(☞ 구체적 신청방법, 선정기준 등 : 참고 2)

《기대효과》 신평사는 발행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평가를 수행

- 기업은 '등급쇼핑'을 하지 않고 당당히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음

나.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화

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

- 신평사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*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
(현행 최대 '영업정지' → 최대 '인가취소')

- * ① 신용평가회사간 등급담합
②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, 제공받는 행위
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평가 제한을 우회적으로 회피
④ 평가계약 체결 전 예상신용등급 관련 정보를 발행기업에게 제공
⑤ 평가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

- 평가조직-영업조직의 분리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의무 부과

②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 확대

- (현행) 임직원이 평가대상기업 주식(지분)을 소유한 경우
- (개선)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가 i)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, ii) 평가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 미만인 경우

③ 신평사 대주주 요건 강화

-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신평사 설립 인가기준 중 대주주 요건으로,
 - “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과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”을 추가

《기대효과》 신평사·임직원·대주주의 쉐 차원에서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강화되어 부당한 유인으로 신용등급이 적정수준과 달리 산정될 가능성이 축소됨

다.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부과

- 신평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,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 (투명성보고서*)를 작성하여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·거래소·협회에 제출하고,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

* (기재사항) 신평사 지배구조, 평가인력의 전문성, 내부통제 조직·규정체계, 내부감사 실시항목, 평가관련 내부심의절차, 부문별 매출액, 최근 3년간 소송 제기 현황 등

《기대효과》 신평사의 내부통제 절차 등에 대한 시장규율이 강화되어 신평사 스스로 평가능력과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확대

-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'18.1.1일(공포일, 잠정)부터 시행될 예정
 - 한편, 법률(자본시장법) 개정이 필요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사항은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('17.7월 법률안 국회 발의)
 - 새로운 제도 환경 하에서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도 보다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임 ('18.상반기)
 - 민간위원 중심의 「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('16.12월 구성)」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
- ※ 그밖의 「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」의 구체적 내용은 '16.9.22일 보도자료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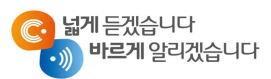
< 금융 용어 설명 >

- 신용평가: 신평사가 기업 또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등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등급(예: AAA~D)으로 표기한 정보
- 등급쇼핑(rating shopping): 회사채등 발행기업이 사전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를 선택하여 신용평가를 받는 행태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1.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발의 ('17.7월)

개정 사항	세부 내용
신평가 손해배상책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평가사의 평가절차*·행위규제** 위반(고의·중과실)으로 산출된 신용등급으로 손실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부과 * 적절한 평가방법론에 따른 신용평가 실시 ** 신평가사간 등급담합, 발행회사 등 신용평가 요청인의 등급쇼핑에 응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

2.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 ('18.1.1일(공포일, 잠정) 시행)

개정 사항	세부 내용
신평가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	- 신평가사의 주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(최대 '영업정지' → 최대 '인가취소')
대주주 요건 강화	- 신평가 설립 인가기준 중 대주주 요건으로 "신용평가 회사의 공익성과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"을 추가

3.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완료 ('18.1.1일(공고일, 잠정) 시행)

개정 사항	세부 내용
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	- 신평사가 발행기업 의뢰 없이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신용평가하는 제도 도입
신평가 선정신청제 실시	- 회사채 발행기업이 희망하는 경우, 금감원이 선정 하여 통보하는 신평가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는 대신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
신평가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용평가 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의무화 - 신용평가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·직원의 범위 확대 등
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부과	- 신평가사의 내부통제 정책,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·공시 의무 부과

4. 기타 주요 추진현황

추진 사항	세부 내용
자체신용도 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7.1.1일부터 민간금융회사 자체신용도* 공개 → '18년부터 일반기업까지 공개 확대 예정 * 모기업·계열사 등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
신평가 역량평가 실시	- '17.5월부터 연 1회 금투협 중심 평가 실시 중

참고2

신평사 선정신청제 운영방안

[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('17.12.21.), 시행('18.1.1. 예정)]

※ 금감원 중심으로 발행기업 · 증권사 · 자산운용사 등 신용등급 이용자와, 신평사 · 금투협회 ·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T/F 운용
→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평사 선정시스템 개발 완료

① (신청대상) 무보증사채(금융채, 전자단기사채, ABS, 상법상 유동화 증권(ABB) 제외)를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

② (신청방법) 발행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로부터 최소 25 영업일* 전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(DART)**에 접속한 후

* 금감원 선정 · 통보(5영업일), 신평사 평가제한사유 검토(3영업일), 신용 평가(15영업일) 소요 등 감안

** 사이트 주소 : <http://filer.fss.or.kr>

○ 발행예정 무보증사채 관련정보*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선정신청서를 작성 · 제출하면 되고

* 무보증사채의 명칭 · 종류, 발행예정금액 · 예정일,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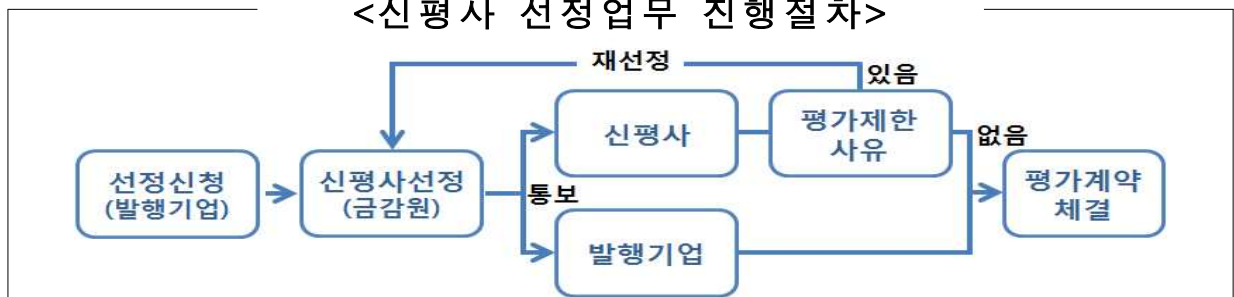
○ DART 미등록기업은 DART 등록후 선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, 시행초기에는 서면신청서 접수도 병행할 예정임

<신평사 선정신청서 접수시스템(DART)>



③ (선정통보) 금감원은 선정신청서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선정 내용을 이메일 및 DART 등을 통해 신청기업과 신평사에 통보

<신평사 선정업무 진행절차>



- ④ (신평사 선정기준) 순환배정 및 차등배정으로 선정하며, 시행 1차년도('18.1.~'18.6.)는 순환배정 100%, 그 후부터는 1년 단위 (매년 7.1.~다음해 6.30.)로 순환배정 70%, 차등배정 30%로 선정

* 발행기업의 신청전에는 선정대상기업수를 알 수 없어 시행 1차연도는 순환배정하며 그 이후는 직전연도 선정신청건수의 30%를 차등배정

- 순환배정 : 직전년도의 신평사별 신용평가매출규모 순서와 발행기업의 신청서류 접수순서를 순차 대응하여 배정
- 차등배정 : 신평사별 평가능력점수* 20% 및 역량평가점수** 10%를 적용하여 신평사간 배정대상기업수 차등

* 평가능력점수 : 신평사가 보유한 각 평가전문인력의 평가경력 연수별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점수 합산

** 역량평가점수 : 신평사 역량평가(금융투자협회) 결과 산출된 신평사의 정량평가지표(정확성, 안정성, 유용성) 점수를 합산

- ⑤ (선정신청 제한) 발행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계약 미체결시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신평사 선정신청을 제한

- 평가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도 발행기업의 동일 발행계획*에 대해 신평사 선정신청을 제한

* 계약철회후 1월내 선정 신청, 주간사회사 재선정절차 없이 신평사 선정 신청

- ⑥ (도입효과) 발행기업은 복수평가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자금 조달비용을 절감*할 수 있고,

* 예) 자산 1,500억원인 기업이 500억원의 무보증사채 발행시 1,700만원 [기본수수료 1,200만원 + 비례수수료 500만원(500억원 x 약0.01%)] 절감, 정기평가시 연간 360만원(기본수수료의 약30%) 절감

(※ 참고 : 신용평가 수수료율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비용 절감액은 발행 사례·신평사별로 다를 수 있음)

- 신평사는 감독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함에 따라 발행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평가업무 수행이 가능

- ⑦ (이용 홍보) 무보증사채 발행기업이 선정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협회·코스닥협회와 함께 개별회사에 대한 안내자료 발송, 자금담당 실무자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임

- 신평사 선정신청제와 외부감사인 지정제도*는 기업으로부터 신평사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신용평가 및 외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,

* 상장예정법인, 감사인 미선임,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, 부채비율 과다, 감리 조치 등의 사유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

- 감사인 지정은 강제지정이 대부분인데 비해 신평사 선정은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무보증사채 발행기업의 자율적 신청이 있을 경우 선정함

구 분	신평사 선정신청제	외부감사인 지정제도
목 적	• 기업으로부터 신평사 및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신용평가 및 외부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함	
대상기업	•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 중 선정을 신청한 기업	• 강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일부기업
선정·지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순환배정(70%) 및 차등배정(30%)으로 선정 (1차 연도는 순환배정 100%) - 차등배정은 신평사별 평가 능력점수 20% 및 역량평가 점수 10%를 적용하여 신평사간 배정대상기업수 차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고려한 감사인 지정점수를 산정 • 산정된 지정점수가 높은 회계법인 순으로 자산규모가 큰 기업을 지정
계약 미체결시 기업 불이익	•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신평사 선정신청 제한	• 감사인 미선임 등으로 제재 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선정·지정시 인센티브	• 복수평가의무 면제	-